

# 또 시험대 오른 정세균 리더십

##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싸고 비주류 강력 반발 계파 충돌



### 공천 갈등 극복 못하면 차기 당권 타격

6·2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 바람'을 일으켜야 하지만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 대표에게 놓인 최대 과제는 혁신 공천 방법으로 내세운 '시민공천배심원제'의 현실화 문제다. 정 대표 측근 그룹인 386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와 지방선거 기획본부, 통합과 혁신위원회 등에서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 호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등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박주선 최고위원과 과반 이상의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효석 전남도당 위원장과 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화에는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제가 구 열린우리당 출신 국회의원이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은 구 민주당 출신 현역 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남지역 모 단체장은 열린우리당 출신 국회의원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천하기 위해 중앙당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혁신 공천'이 아니라 '입맛 공천'이며 지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주류 측도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 주류 측이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천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장과 인천시장 후보에 한명숙 전 총리와 송영길 최고위원 등을 전략공천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자 비주류 측 주장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경선 주자인 이종걸 의원과 서울시장 경선에 나서는 이계안 전 의원, 인천시장 경선에 나서는 유필우 전 의원 등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도부에 편파적 공신위 구성을 시정하고 국민경선 전면 실시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정동영계 등 비주류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종걸 의원은 "지도부가 요구사항을 계속 거부하면 후보 사퇴까지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처럼 공천을 둘러싼 당권파와 비주류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당권파 및 중도와 내부에서도 정 대표의 결단력에 회의적 시각이 대두되면서 정 대표가 과연 어떻게 '공천 갈등'을 극복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세균 대표가 이번 공천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차기 당권 경쟁에서 많은 적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특히, 당 내부의 갈등은 결국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천 방법 등을 둘러싼 정 대표의 선택은 민주당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한화갑 平民黨' 이라니...

## 민주당 지도부 난맥상 한심하지만 선거편 신당창당 보는 지역민 착잡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가신 그룹인 동교동계의 일부 인사들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나선데 대해 광주·전남지역민과 지역 정치에서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권노갑 민주당 전 고문과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 김옥두·이훈평·정대철·장성민 전 의원 등 동교동계 11명은 지난 5일 서울 마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신당 창당 문제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한 전 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노선과 당 운영 등에 있어 실패한 열린우리당의 모델을 반복하고 있어 근본적 변화 없이는 희망이 없다"며 신당 창당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재승·한영애 전 의원은 찬성했으나, 권 전 고문 등 대부분 인사는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14일 이후다

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신당 창당파들의 생각은 DJ의 후광을 입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친(親)DJ 신당'을 창당,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겠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 측은 중앙선관위에 '평화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 창당준비위원회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거저 교동계 11명은 지난 5일 서울 마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신당 창당 문제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한 전 대표의 생각대로 신당이 만들어질지는 미지수다.

동교동계 대변인격인 장성민 전 의원은 7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신당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뜻과, 역사의 길도 아니며 국민은 민주당을 변화·개혁시켜 수권정당으로 만드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권 고문 등 대부분 동교동계 인사들도 같은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당 창당은 동교동계의 명성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도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초청으로 지난 6일 홍콩으로 간 이희호 여사도 출국에 앞서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불편한 심기를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신당파가 지역적 기반으로 생각하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지역민들은 국민참여당 창당에 이어 또 다른 당이 만들어질 경우 야권 분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권 교체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민을 위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분열과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장 관계자는 이날 "신당 창당설이 알려지면서 이를 걱정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한 전 대표는 역사를 거스르는 창당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첨단·하남·장성 5천만㎡ 확 바뀐다

## 광주 R&D 특구 16년간 1조 1백억원 투입

광주 연구·개발(R&D)특구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광주가 명실상부한 첨단과학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광주R&D특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 안에 '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또 2011년부터 2026년까지 16년간 총 1조145억 원의 예산을 투입, '연구개발특구' 관련 사업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도 시청 내에 특구지원부서를 신설하고, 특구 종합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주시가 지난달 초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R&D특구 신청서에 따르면, R&D특구의 범위는 첨단 1·2지구(1천170만㎡), 장성지구(1천30만㎡), 하남지구(681만㎡), 신흥지구(358만㎡), 진곡지구(191만㎡), 등임지구(303만㎡), 산정지구(397만㎡), 소촌지구(281만㎡), 평동지구(712만㎡) 등 5천200만㎡에 이른다. 특구 내에는 한국광기술원 등 연구기관 204곳, 광주과학기술원 등 학사과정 이상 교육기관 6곳, 광주 테크노파크 등 협의기구, 첨단산단 등 산업단지 등이 포함돼 있다.

광주시는 특구에서 창출된 연구성과를 지역 내에서 사업화로 바로 연계함으로써 기존 대덕특구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복안이다. 또 신재생에너지·첨단부품소재산업 등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과 연계해 특구를 개발하고, 연구개발(R&D)부터 비즈니스,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과의 접목을 통해 '첨단과학문화 클러스터'로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R&D 특구 내 첨단산업단지 및 진곡산업단지가 각각 광산업·LED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클린디젤산업 등을 주축으로 해 1단계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특구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 내 토지이용계획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인 장성지구의 구역 해제가 점진적으로 추진되며, 연구개발 분위기를 해치는 유흥업소 등의 지역 내 신규 진입은 제한된다.

특구 내 도로 및 응수 등 기반시설 설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며, 특구 내 개발사업은 특별법을 적용받아 각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과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 등에도 편의가 제공되며,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해서도 최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매년 500억 원~7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 등 자금 지원 및 세제 감면 혜택도 가능해진다.

또 연구개발(R&D)특구 사업은 ▲광역경제권 연구거점화(사업화 R&D프로그램 운영) ▲창업 및 연구성과 사업

광주 연구개발특구



화(기업중심 기술사업화 체계 구축) ▲특구 선도 중소기업 육성(상품화 구축 및 중소기업 육성 등) 등 3가지 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3년 광주R&D특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2007년 말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광주R&D특구가 확정되면서 3년 동안 지식경제부에 조기지정을 요청해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식경제부가 올 하반기 중 특구 개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 R&D특구 지원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등 R&D 특구 관련 사업은 모두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며, 광주시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R&D특구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양 지역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특구=Research and Development 특구.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사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목표로 한 세계수준의 연구·개발 주도형 혁신 집합단지(클러스터)를 의미한다. 연구기관·대학·산업단지 등이 집적돼야 하며, 도로나 응수 등 기반시설 설치는 물론 전략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시설도 국가 주도로 진행된다. 현재 대전 대덕이 국내 유일의 R&D특구다.

**한잔의 나눔 한끼의 행복**

참이슬 情나눔 2억원 조성 캠페인 (광주·전남지역)

매일 한잔의 나눔을 실천하면 참이슬음료에게 2억원의 나눔을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참이슬음료는 참이슬음료의 나눔을 실천한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이슬 차이슬

참이슬 차이슬

참이슬 차이슬